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1

2025 JANUARY

VOL. 97

2025년 경제·산업의 전망과 재정

보다 깊은 눈으로 짚어보는



한국재정정보원

Theme Story

새해를 맞이해 2025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해 둘러봅니다.
한 해 동안 세계와 국내의 경제성장률의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여건에 대해 짚어봅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트
재정집행관리와 신속집행 실적

08 이달의 재정 VOCA
예산의 배정

10 재정칼럼
2025년 대내외 경제전망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실장

2025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여건과 전망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환경산업실 실장

재정 NOW

2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4년 11월 기준 재정동향

24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4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36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스페인 황금시대의 예술과 흥망성쇠
찬란한 시작과 허망한 몰락

42 내가 써온 한국 재정사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변경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효과

48 재정이 MONEY
전기차 캐즘, 그 이후를 대비하자

52 플랫폼이 된 도시
계획도시의 발전: 세종과 화성
시대의 변화를 담은 두 도시

58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60 FIS 재정 알리미
똑똑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64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재정집행관리와 신속집행 실적

글 •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정부는 정부의 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해 목표를 달성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일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673.3조 원이 넘는 예산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기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효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은 재정집행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연간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재정집행관리방향은 상반기에 신속집행 점검으로, 하반기에 주요 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신속집행은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집행을 의미하며, 2020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속집행 정책은 대략 2008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경기대응 측면으로 강화된 바 있다. 당시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상반기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하반기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속집행은 연간 불용률 관리 관점에서도 기능을 한다. 하반기 주요 사업 집행관리는 주요 관심 분야의 재정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2년 물가 대응 재정사업으로 추경 편성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사례다. 이하에서는 신속집행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신속집행률 목표는 매년 초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설정한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국가재정법』 97조와 동법 시행령 48조에 근거한 재정집행의 관리를 위한 협의체이다. 점검회의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예산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관리하며, 예산낭비신고 실적 및 대응 실적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신속집행은 기존 상저하고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에 국한하지 않고 집중 투자 사업 집행관리에도 중점을 두는 등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집행전략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봉쇄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관리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2025년에는 건설부진, 심리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률인 67.0%로 설정해 민생경제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설정 |

(단위 : 조 원, %)

연도	본예산	연간계획	상반기	집행률	재정관리점검 목표
2017	400.5	233.7*	135.6*	58.0	·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부족한 민간수요 보완
2018	428.8	274.4	159.2	58.0	· 연초 경기회복세 지원
2019	469.6	250.4	154.6	61.7	·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
2020	512.3	305.5	189.3	62.0	· 경기 하방위험 대비 예산 효과 극대화 · 경기활력 제고, 포용적 복지 ·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사업 신속집행(75%)
2021	558.0	293.3*	185.0*	63.0	·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뒷받침
2022	607.7	201.0	126.6	63.0	·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 집중투자
2023	638.7	242.9*	156.0	65.0	· 경기하방위험 선제적 대응
2024	656.6	252.9	164.4	65.0	· 경기회복 온기 확산
2025	673.3	254.0	172.0	67.0	·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

• **주** : 연간계획은 연초 발표한 목표 설정의 기준이며, 2017년, 2021년. 2021년은 발표 시점에 정보가 없어 본예산과 이월 포함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저자가 재정리함

신속집행 관리는 상반기 중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목표 신속집행률은 매년 초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목표 신속집행률은 2017년 58.0%에서 지속적으로 상향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67.0%로 발표하였다.

2017년 이후 관리대상사업의 신속집행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의 목표 신속집행률은 58.0%였으나, 실제 상반기 집행률은 57.3%이다. 신속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상반기 69.5%였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정책, 경기침체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지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반영된 결과였는데, 당시 최대한 신속한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2024년은 상반기까지 167.6조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252.9조 원 대비 66.3%를 지출해, 목표 신속집행률 65.0%를 초과 달성하였다.

| 관리대상사업 분기별 재정사업 집행률 추이 |

(단위 : 조 원, %)

연도	연간 계획	상반기 집행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2017	243.2	58.0	74.5	30.6	139.3	57.3	193.0	79.3	239.7	98.5
2018	242.3	58.0	75.8	31.3	150.9	62.3	202.6	83.6	241.0	99.5
2019	258.3	61.7	84.5	32.7	165.8	64.2	217.9	84.3	259.3	100.4
2020	312.1	62.0	99.5	31.9	194.3	62.3	260.0	83.3	308.3	98.8

연도	연간 계획	상반기 집행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2021	322.7	63.0	113.8	35.3	212.3	65.8	273.7	84.8	326.0	101.0
2022	253.5	63.0	87.2	34.4	176.2	69.5	207.5	81.9	246.3	97.2
2023	242.9	65.0	82.8	34.1	159.7	65.8	192.3	79.2	231.7	95.4
2024	252.9	65.0	106.1	41.9	167.6	66.3	197.4	78.1	-	-

• 주 : 예산 조정으로 연초 설정한 연간계획에 미반영 사업이 많은 경우 집행률이 100% 초과 가능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정부는 재정집행관리를 위해 사업군 또는 사업유형별로도 관리하고 있다. 우선 SOC 사업은 집중 관리 사업군을 특정하고, 연내 완료되는 사업 중 상반기 내 조기 완공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동홍천~양양 고속국도'사업을 6개월 조기 개통하도록 하였고, 2022년에는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조기 사업계획 확정·설계·발주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독려하였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한 독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 사업자 선정 단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 관리 사례를 보면, 2017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상반기 70% 집행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3년 총 일자리 목표 104.4만 개 중 취업 취약계층 1월까지 59만 개 조기 채용하고, 상반기 94만 명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의 적기 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특징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상반기 재정집행관리 사례를 보면, 2020년 연금 3법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자·시행자의 업무 상황 점검도 병행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사업 예산 10.5조 원 중 1분기 내 80%, 2분기 95% 집행하였다.

주요 사업유형을 SOC, 사회복지, 출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해 연도별 상반기 신속집행액과 집행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C 사업의 집행액 규모는 13조 원에서 18조 원 가량이며, 집행률은 2017년 60.3%에서 2024년 71.4%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액은 2017년 21.4조 원에서 2023년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2024년 64.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신속집행률은 2017년 52.5%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0%를 초과하고 있다. 2024년 신속집행률은 64.1%이다.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1.1조 원에서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1년 31.9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7.3조 원이 집행되었다. 출연사업 집행률은 여타 사업군보다 빠른 집행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를 초과하고 있다. 2024년 출연사업의 신속집행률은 79.7%였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액은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신속집행률은 60%대를 지속하다 코로나19 지원사업이 컸던 2022년 84.0%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70.6%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유형별 상반기 신속집행액, 집행률 추이

(단위 : 조 원, %)

구분		SOC	사회복지	출연사업	국고보조	전체
2017	집행액	13.1	21.4	21.1	27.1	139.3
	집행률	60.3	52.5	66.0	60.0	57.3
2018	집행액	11.6	24.7	21.8	30.5	150.9
	집행률	60.9	62.0	72.2	63.6	62.3
2019	집행액	13.1	31.3	20.7	35.8	165.8
	집행률	65.2	60.9	77.0	65.9	64.2
2020	집행액	14.8	34.8	23.9	51.6	194.3
	집행률	66.3	52.3	66.0	64.1	62.3
2021	집행액	18.1	44.9	31.9	59.5	212.3
	집행률	70.2	64.4	78.3	66.7	65.8
2022	집행액	16.0	30.8	35.7	82.9	176.2
	집행률	60.8	60.2	77.1	84.0	69.5
2023	집행액	15.7	60.6	37.1	66.6	159.7
	집행률	65.4	66.6	76.9	68.1	65.8
2024	집행액	17.9	64.1	37.3	73.6	167.6
	집행률	71.4	64.1	79.7	70.6	66.3

• 주 : SOC 사업은 16대 재정사업 분야 중 '교통및물류'와 '국토및지역개발'를 합한 것이다. 사회복지는 마찬가지로 16대 재정사업 중 '사회복지'분야를 의미한다. 출연사업은 지출목 중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합으로 정의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이전'과 '민간이전'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출세목의 합으로 정의한다.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1.2. 발표)과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1.9.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회복 신속지원을 위해 신속집행 규모를 전년대비 10+α조 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67%, 지방정부는 60.5%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규정을 완화하고,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최대한 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수혜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연초 조기 착수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달의 재정 VOCA

예산의 배정

한 해의 국가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예산 집행, 즉 계약이나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만큼 집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예산의 배정이라는 절차와 이후의 자금배정을 거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정수지의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2조, 43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예산 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확정 후 각 부처 장관 등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두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합니다. 이 때 비로소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절차



2025년 예산배정계획

2025년 예산배정계획은 지난 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는데,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소요에 조기 배정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
대내외 경제전망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실장

2025년에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세 지속 예정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과 중국의 경기 둔화 속에
우리나라는 더딘 금리인하와 낮은 성장률,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 및 중장기적인 성장세 둔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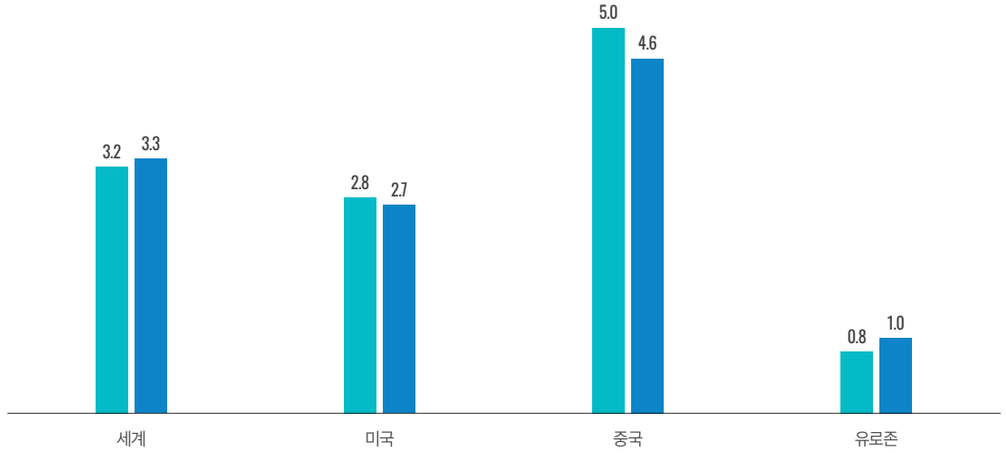
-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과 유사한 3.3%, 미국과 중국은 2024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
- 미-경제 강한 성장세에 점진적 금리인하 예상, 중-낮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
- 한국, 내수 침체는 민간 소비 중심으로 다소 완화,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2.0%로 낮아질 전망



2020년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충격을 겪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급격한 경기 위축을 겪은 후, 40년 전을 소환해야 할 정도의 고물가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는데, 2022년 중순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고금리 시대를 열었다. 미국경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염려하게 됐다.

IMF는 2025년 1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유사한 3.3%로 전망하였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에 연평균 3.5% 정도 성장해 왔음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다소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셈이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규모가 크고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2025년 성장률은 2024년보다 낮을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그림 1 2025년 세계 경제전망 단위: %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25; IMF.

먼저 미국경제를 살펴보자. 미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금리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작년 12월 설문조사에서 올해 미국의 금리가 0.5%p 정도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달리,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노동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저출생 문제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 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강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늘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장기적 현안보다는 단기적 실리를 중시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 성장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 확대는 경기부양 효과를 내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보다는 원유 생산을 확대하면서 경제 전반에서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정책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10~20% 인상하고, 특히 중국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미국이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IMF는 분석했다. 트럼프가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세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수 국가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며 미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기부양과 관세



인상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금리인하는 더욱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달러화의 강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경제는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이미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으며 부동산투자는 3년 연속 약 10%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택가격은 6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투자에 의존한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중국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물가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대부분 국가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려고 고금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중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경제가 성숙하면서 이런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도 부동산 부문의 문제와 미국과의 통상분쟁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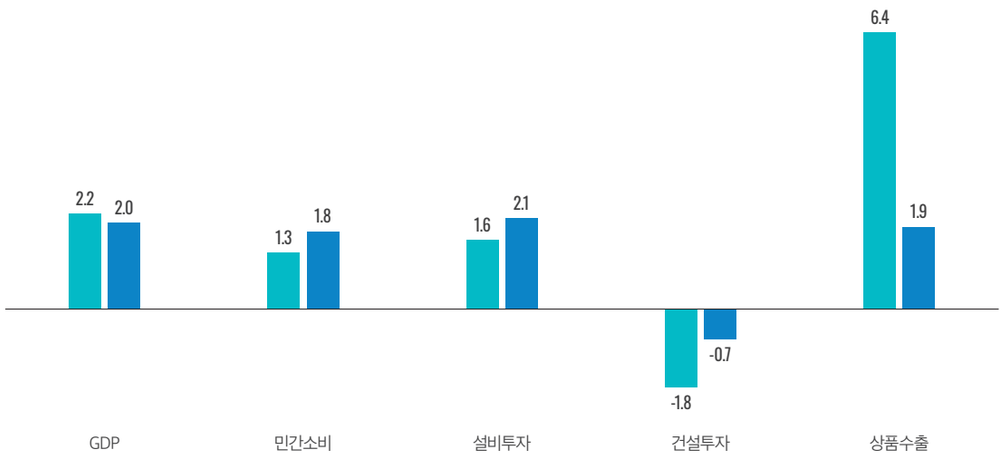
이제 우리 경제를 살펴보자. 코로나 위기 이후 발생한 고물가 문제를 우리 경제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빠르게 올리며 고물가에 대응함에 따라, 내수와 고용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고금리 기조가 주택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도 부진해졌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서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이 효과가 내수로 빠르게 퍼지지는 못했다. 2023년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기업실적 악화는 2024년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정부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개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다행히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안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2.2%보다 낮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2024년 수출 회복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 속도가 느리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소비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4년 민간소비는 1.3% 증가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2024년 1.8% 감소에 이어 2025년에도 0.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 부진으로 공사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건설투자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와 수출도 대외 환경 악화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설비투자는 2.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출은 2024년에 6.4%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1.9%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내수 침체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5년 경제성장률은 2024년의 2.2%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은 1.6%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 시장의 여건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해지면서 이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4년 16만 명에서 2025년 1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25년 실업률은 2024년과 동일한 2.8%로 예상된다.

그림 2 2025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자료: 2024 하반기 KDI 경제전망.

그러나 이와 같은 KDI의 전망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 2017년에 시작된 트럼프 1기 때는 2018년에 관세가 인상된 바 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에 관세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2025년 경제성장률이 KDI가 전망한 2%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심해진다면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런 위험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다. 국내 상황도 불안하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정국 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 통상협정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국 혼란으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리 경제는 과거 선진 경제를 따라잡으며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에서 중국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에서도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다. 핵심 기술에 기반한 차별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아울러 환경 변화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혁신을 통해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신생기업이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여건과 전망**[1)]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 실장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 환경 변화 대응,
선도 부문에서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계속되어야 하며
위축 예상되는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대비책 마련 중요

- 주요 수출 시장 수요는 중국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 강화 영향으로 통상 여건은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
- 13대 주력산업은 AI 확산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세 지속되나 성장률 저하



1) 본 원고는 "2025년 경제·산업전망"(산업연구원, 2024.11)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025년 대내외 여건 변화

국내 주력산업이 바라보는 2025년의 세계 주요국 수요는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서버 교체 수요 발생(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바이오헬스) 등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다만, 대기 수요 해소(자동차), 전기차 판매 둔화(이차전지) 등의 부정적 요인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시장에서는 구매 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 노후설비 구조조정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 수요에 대한 긍정 요인이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지속과 유럽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운송비용 상승 등은 본격적 수요 회복의 저해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성장 정체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의 수요가 부진할 전망이나, ICT 수요가 호조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국산 중간재(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른 중국 전반의 추가적인 시장 위축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한편,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2025년 통상 여건은 한층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2025년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비용 증가, 무역장벽 및 물류비용 증가와 인도 등 현지 수요 증가 대응 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에 따라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GM으로부터 인수한 인도 공장의 가동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대다수 산업에서 중국 내 현지 생산 규모는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내 주력산업은 2025년에도 전기차, 첨단섬유 및 바이오 등 신성장 유망 분야 관련 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AI·DX 전환과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의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전환이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전기차 전용 설비가 2025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철강은 생산량의 정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친환경 신제품 수요 대응, 기존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는 2025년에도 지속되고 특히 고부가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석유화학의 2025년 설비투자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로 대규모 생산설비 신·증설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 및 다운스트림 제품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전망이고 정유는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COTC(Crude Oil to Chemicals) 설비투자와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신설을 중심으로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섬유산업은 첨단 섬유 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태광산업(아라미드) 및 도레이첨단소재(아라미드, 탄소섬유)의 설비 증설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나 범용 부문의 경우 공급능력을 확대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2025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수출, 공급망 변화에 대한 우려와 다소의 기대가 공존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중국의 과잉공급 및 경쟁력 신장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내수 부진에 따른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 여력의 감소,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국내 내수 시장 잠식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초격차를 확보한 분야에서도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점유율 축소, 단가 경쟁 심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급속한 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단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 확대 기조의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AI 확산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올해 부진하였던 내수의 회복도 일부 나타날 전망이다. 13대 주력산업의 올해 수출은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내수 역시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세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은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자동차 등 대다수 산업에서 전년의 위축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기기·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의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철강·섬유·이차전지는 다소의 침체국면이 이어지는 부정적 기조가 우세하다.

국내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한 바 있다. 2025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주요 수요시장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한국 반도체산업 역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2025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신제품 수요의 발생 및 글로벌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의 회복도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변수이지만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추진, 특히 생성형 AI 활용 확산이 국내외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미 의약품 수출 여건 개선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올해에도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 2024년의 경우 임플란트, 필러, 진단용 의료기기 등 수출 주력 의료기기의 견조한 수요와 바이오시밀러, 보툴리눔 톡신 등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따라 전반적 실적의 호조세를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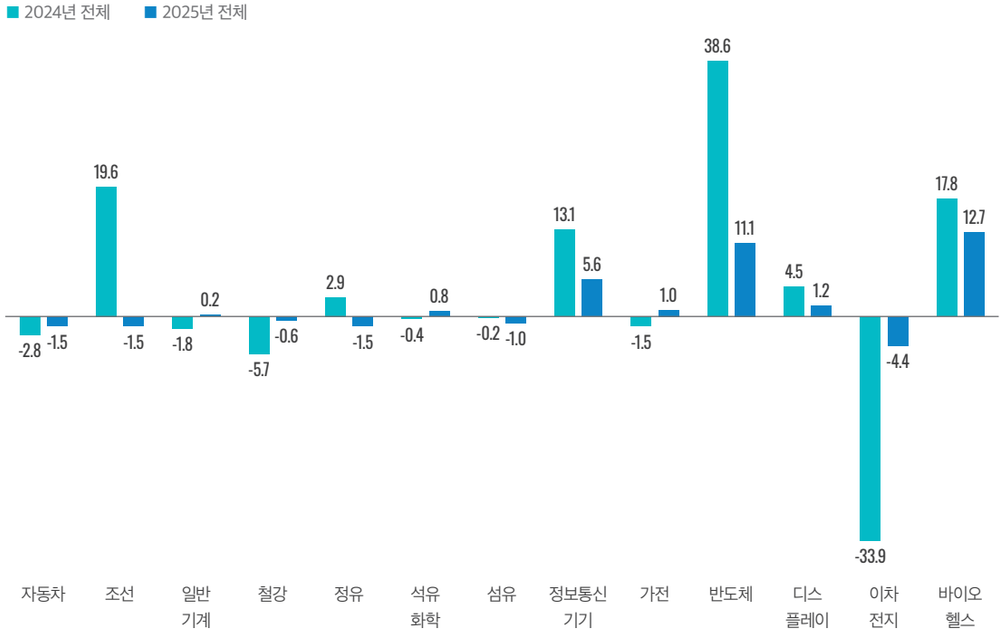
조선 산업은 올해에도 풍부한 수주잔고에 따라 생산(건조)량은 전년 수준이 유지되고 높은 수준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과 수출이 지속될 예정이나, 해운 시황 악화로 수주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가전의 경우 글로벌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답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태블릿 OLED 수요 확대가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이어져 2023년의 침체에서 벗어났으나 가장 주요한 수요 제품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축소된 바 있다. 2025년에도 신규 수요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쟁력 상승에 따라 성장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일반기계 산업은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의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보합세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2024년까지 지속된 국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일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규모도 평년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정유의 경우 2024년 하반기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이 2025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나, 2025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의 견고한 증가와 공급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그동안 BEV(배터리전기차), HEV(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가 자동차산업 성장을 견인했으나 올해는 BEV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수출을 대체하면서 국내에서의 자동차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편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어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감소 물량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침체 국면에 진입한 철강은 2025년에도 성장의 정체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 산업은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및 투자 부진 영향으로 생산 및 내수의 큰 폭 하락을 시현하였으며 2025년에도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와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에 따른 시장 경쟁 확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도 업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베트남 등 생산기지의 섬유 소재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수입 중심의 내수 성장만 나타나는 부정적인 흐름의 지속이 예상된다. 2025년의 이차전지 업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차전지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에서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며, 다만 2024년 큰 폭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2025년의 주요 지표 감소폭 자체는 전년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그림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시사점

2025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국의 추격과 과잉 생산은 2025년에도 주력산업의 수출과 내수를 위협할 수 있으며, 미 대선 결과도 우리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이슈다.

따라서 위축이 예상되는 산업의 내수 진작, 수입 범람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며 수요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지원 역시 주요한 정책 과제일 것이다.

재정동향 2024년 11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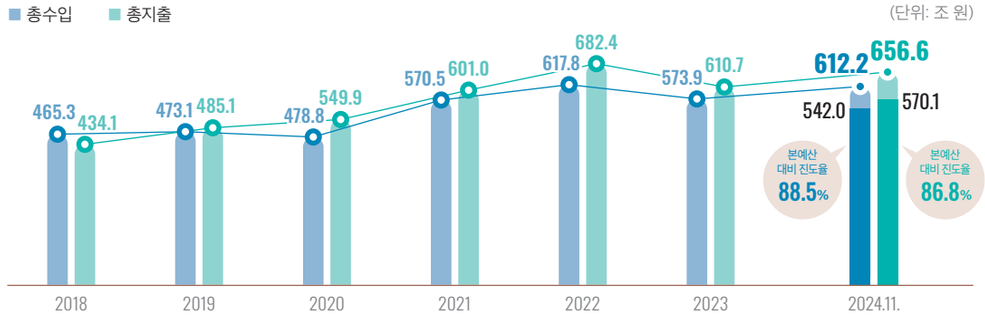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12.8**조 원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28.2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8.7**조 원(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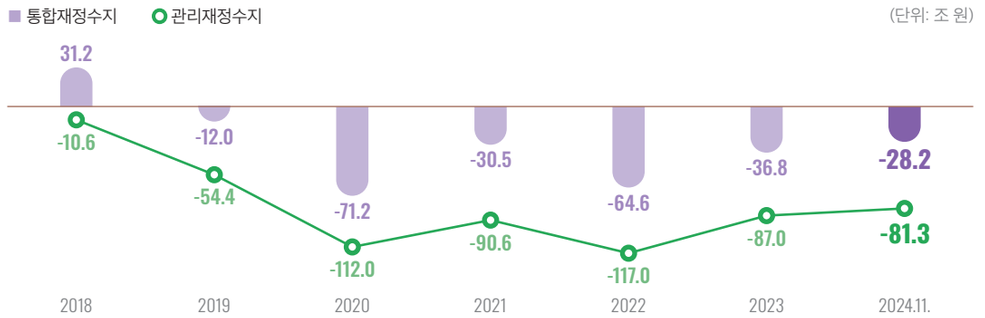
81.3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6.4**조 원(적자 확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1조 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주: 2023년까지는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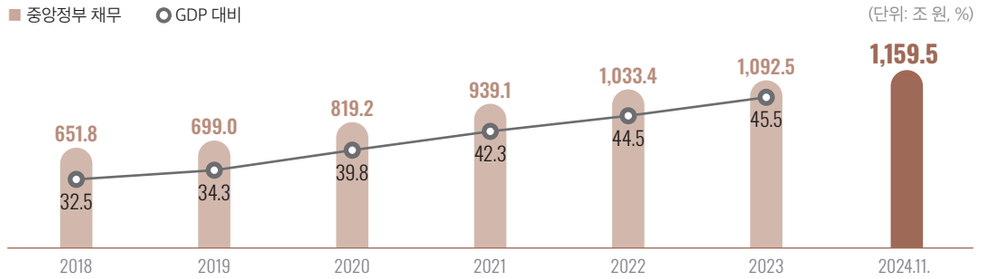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전월 대비 **+4.1**조 원

1,159.5
조 원

전년 말 대비 **+67.0**조 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2개월 차)	규모	6,285억 달러	1조 2,527억 달러	6,242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3%	33.3%	64.0%
독일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3,663억 유로	4,168억 유로	505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0.2%	1.0%	-37.0%
일본 10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34조 3,636억 엔	66조 5,877억 엔	32조 2,241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1%	-3.5%	0.5%
프랑스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3,120억 유로	4,621억 유로	1,500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0%	-2.4%	-14.8%
영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7,175억 파운드	8,308억 파운드	1,131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2%	2.7%	1.0%

**자료 :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November 2024(12.11. 발표)
•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November 2024(12.20. 발표)
•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12.20. 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0 Novembre 2024(1.15. 발표)
•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4(12.20. 발표)

대한민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차)	규모	542.0조 원	570.1조 원	28.2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4%	3.9%	44.6%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 빠르면 1월 14일에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미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미국 민주당 최고 지도부, 일론 머스크의 정부 비용절감 임무에 호의적
- 미 재무부에 중국 해킹 세력이 접근함에 따라 옐런 장관은 중국 허리펑 부총리에 '이는 중대한 우려'라며 문제 제기

2 | 독일

- 2025년 2월 23일로 예정된 선거까지 기존 예산안에 근거한 임시 예산 시행 예정

3 | 일본

- 일본, 13.9조 엔 규모의 경제 패키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물가대응, 재해복구 비용 등 포함
- 일본 정부, 지난 예산안 대비 2.3% 증가한 115.5조 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4 | 프랑스

- 무디스는 프랑스 정치 혼란 지속에 따라 신용 등급을 Aa3로 한 단계 하향
- 프랑스 의회, 특별 예산연장 법안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 방지
- 신임 재무장관 롱바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 소폭 완화를 시사

5 | 영국

- 봄 예산안은 발표하지 않지만 OBR 경제재정전망보고서는 3월 26일로 예정, 영국 재무부는 성장률 부진 등 재정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 공식화

6 | 중국

-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5% 성장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GDP의 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재정 운영을 계획

국제기구

1 | IMF

- "개발도상국에서 경기 불확실성과 실시간 재정정책 조정(Output gap uncertainty and fiscal policy adjustment in real-time in emerging countries)" 워킹 페이퍼 발표

2 | OECD

- "최신 보건 지출 동향; 최근 위기 너머로의 탐색" 정책 브리프 발간
- "녹색 예산 태깅을 넘어서 : 공공예산이 어떻게 기후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까?"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12.27.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 빠르면 1월 14일에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미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1]

* 부채한도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193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3번 인상된 바 있음

-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빠르면 1월 14일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신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촉구**
  - 미 의회는 2023년 예산안 합의 시 부채한도의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키로 합의한 바 있음
  - 재무부는 현재 1월 14일~23일 사이 부채한도 도달을 예상하며, 이때부터 재무부의 특별조치(공무원 연기금 적립, 퇴직 우편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연기 등의 정부투자 지연)가 없으면 정부 운영 지속 불가
  -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재무부 특별조치가 효력을 다 하여 미 정부가 디폴트를 맞이하는 시점은 금년 여름이 될 것으로 중도 성향의 정책 연구소는 전망
-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 취임 전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부채한도를 근거로 여당인 민주당의 지출 삭감을 요구해 온 공화당은 이에 대해 난색 표명**
  - 미 하원은 미 연방 임시 예산안 기한(12월 20일 금 자정)을 24시간 앞두고 부채한도 2년 연장 등 트럼프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안을 부결[2]
  - 한편, 옐린 장관과 그의 전임자인 므누신 전 장관 또한 부채한도에 대해 "파괴적" 또는 "(지출이 아닌 부채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생각"이라고 각각 언급한 바 있음

12.30. 미국 민주당 최고 지도부, 일론 머스크의 정부 비용절감 임무에 호의적[3]

- **B.샌더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 머스크의 2조 달러 연방 정부지출 감축 계획에서 국방비 및 의료비(행정비용) 삭감 계획을 지지**
  - 다만, 환경보호청, 소비자금융보호국, 퇴역군인 복지 등에 대한 삭감을 반대하며 머스크의 비전과 다른 점을 설명하려 노력

1) https://www.nytimes.com/2024/12/27/business/economy/yellen-debt-limit-warning-congress.html
2) https://www.ft.com/content/c42ec427-307a-4fe2-a4b7-9a1fce2de30a
3) https://www.ft.com/content/2933caa4-f505-4a01-ab0c-9aab4270fe03

독일

1.7. 미 재무부에 중국 해킹 세력이 침입한 데 대해 옐런 장관은 중국 허리펑 부총리에 '이는 중대한 우려'라며 문제 제기[4]

-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이 미 재무부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지 일주일 후, 부총리와 만난 온라인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같이 언급
- 옐런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 경고했으며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를 포함한 중국 산업 정책이 미국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 대해 허 부총리와 논의

12.16. 독일 재무부 장관 외르크 쿠키스(Jörg Kukies)는 2025년 초 총선 이전까지 임시예산(provisional budget)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재무부 내 예산부서는 각 부처에 보낸 서한에서 새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시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기반해 임시예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알림**
  - 임시예산 시행 시 정부는 이미 확정된 기금에 대한 지출과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한 법정 지출만 할 수 있음. 즉 확정된 건설공사, 실업 및 아동수당 등임
  - 임시예산은 선거 이후 정부 수립 시까지 흔히 이뤄지는 조치임
- **선거는 2월 23일로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수립되어 재정정책을 담은 예산안을 내놓는 시점은 2025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측**

12.30. 로이터통신은 차기 총리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선출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채무준칙을 일부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5]

- **기독민주당(CDU)이 1/3의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변이 없는 한 당수인 메르츠의 총리직 선출이 유력함**
  - 그러나 메르츠의 정치적 입장대로 2년간 지속된 독일의 경기를 부양하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0.35%의 채무준칙을 준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음
- **5인의 독일 경제 전문가 위원회는 정부 부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0.35%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인프라 투자, 국방비 지출 및 녹색 전환과 같은 과제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체와 채무준칙 변경이 필요

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1-07/yellen-tells-china-s-vice-premier-hacks-raise-serious-concern
5) https://reuters.com/breakingviews/debt-brake-release-will-pull-germany-out-slump-2024-12-30

일본

12.17. 일본, 13.9조 엔 규모의 경제 패키지 추가경정예산 편성[6)]

- 일본 상원은 금번 회계연도(~'25.3) 추경예산 13.9조 엔을 편성해 물가대응, 재해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새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
- 한편 이번 추경의 절반(6.7조 엔) 정도를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려는 정부 계획은 주요국 중 최악인 국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 심화

12.27. 일본 정부, 115.5조 엔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승인하여 의회 제출[7)8)]

-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국방 지출 증가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15.54조 엔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
  - 2024년 최초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엔 (2.6%)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23년 114.38조 엔을 상회
- **사회보장비용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8.3조 엔으로 전체 예산의 약 1/3을 차지하며, 방위비는 9.5% 증가한 8.7조 엔, 이자 및 국채상환비용은 28.2조 엔으로 전체 예산의 1/4 규모**
  - 내년 세수는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치인 78.44조 엔이 전망되며, 정부는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28.65조 엔 규모의 신규 국채도 발행할 예정
  - 신규 국채 발행액은 17년 만에 30조 엔에 미달하였으며, 내년 예산의 부채의존도는 24.8%로 전망
- **이시바 총리는 내각의 예산안 승인 후 일본의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을 재확인하며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 모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및 환경 조성" 노력할 것 언급

프랑스

12.14.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

- **무디스는 성명에서 이같은 조치에 대해,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에 따른 공공재정의 심대한 악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했다고 밝힘**

6)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12/976283cef738-japan-enacts-139-tril-yen-extra-budget-for-economic-package.html
7)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12/9de3b3bd1941-update1-japan-draws-record-11554-tril-yen-budget-for-fy-2025.html
8) https://nippon.com/en/japan-data/h02256/japan's-fiscal-2025-budget-reaches-record-high-¥115-5-trillion.html

12.17. 프랑스 의회, 특별 예산연장 법안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 방지

- **2025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난 12월 5일 내각이 해산된 바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프랑소와 바이루(François Bayrou)를 새 총리로 지명하고, 26일에는 에릭 롱바르(Eric Lombard)를 재무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
  - 그러나 기존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한 상태
- **바이루 총리 임명 3일 후 국가 주요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프랑스 하원 통과**
  - 이 법안은 예산안 부재에 따른 공공행정 마비 사태를 피하고자 2024년 예산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하고, 기존 세목에 따른 세금 징수 권한과 차입 권한을 정부에 부여

1.6. 신임 재무장관 롱바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감축목표 소폭 완화를 시사

- **롱바르는 라디오 인터뷰 (1.5.)에서, GDP 대비 5~5.5%의 적자폭을 목표로 새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
  - 이는 이전 바르니에 내각이 현 제도 유지시 예상되는 적자비율 6.1%를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5.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계획하였던 데 비해 완화적인 입장
  - 또한 롱바르는 전 총리 바르니에가 내놓았던 600억 유로보다 작은 500억 유로 규모의 세입 증대 및 지출감축 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기업과 가계에 공정한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조세 최적화 메커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여 세금 인상 조치가 새 예산안에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
- **한편 재무부는 2025예산 편성에 필요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전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

영국

12.16.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하원에서 다음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 보고서가 2025년 3월 26일로 예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봄 예산안 발표는 없을 것으로 발언[9)10)]

- **OBR의 경제재정전망은 보통 정부의 봄/가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었으나, 정부는 앞으로 연 1회 가을에만 총예산안(full budget)을 발표할 계획**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commissions-spring-forecast-on-26-march-2025
10) https://www.reuters.com/world/uk/britain-publish-economic-fiscal-forecasts-march-26-2024-12-16

- 내년 3월 전망보고서는 스타머 총리 정부의 첫 '평가서'가 될 전망이며, 성장률 및 가계가처분소득 제고 목표 달성여부, 일상지출 준칙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것
  - 일상지출 준칙; 리브스가 제안한 재정준칙 중 하나로, FY29/30까지 정부의 일상적인 경상지출을 세수로 전액 충당하여 균형예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영국 재무부는 성장률 부진 등 재정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년 봄에 세금을 인상하거나 차입을 늘리는 긴급 예산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1.7. 영국 장기 차입 비용이 25년 전인 1998년 이래 최고 수준에 근접하여서 3천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영 재무부에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11]

- 30년 만기 수익률은 5.246%로 1998년 8월 이후 최고치, 10년 만기 수익률은 4.684%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외거래
  - 이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약 0.3%p 높은 수준
- 차입비용 상승은 리브스 장관이 제안한 일상지출 준칙을 충족시키기 더 어렵게 만들며, 이에 따라서 기 시행된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금 인상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음
  - 국채 수익률 1%p 상승 시 정부 차입 비용은 2029/30년까지 연평균 120억 파운드 증가 예상(OBR)
- 한편 영국 재정연구소(IFS) 등 경제분석가들도 경기 둔화 지속 시 일상지출 준칙 준수를 위해 금년 봄 증세안을 포함한 긴급 봄 예산안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12]

중국

12.17. 2025년 GDP 대비 4% 규모의 적자재정을 운영하여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며, 성장률 목표는 5%로 유지하기로 내부 합의[13]

- 이러한 적자재정 규모는 2024년의 3%보다 확대된 것으로, 12월의 공산당 상무위원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재정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 데 부합하는 것
  - 재정적자 확대폭인 GDP대비 1%p는 1.3조 위안 규모이며, 모건스탠리는 예산 외 채권발행도 완화되어 총 2조 위안가량의 재정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
  - 이와 같은 결정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對 중국 관세 인상 전망에 대한 대비책의 일부

11) https://reuters.com/world/uk/uk-30-year-borrowing-costs-rise-highest-since-1998-2025-01-07/
12)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24/12/16/hiring-plunges-after-rachel-reeves-record-tax-raid/
13)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plans-record-budget-deficit-4-gdp-2025-say-sources-2024-12-17

- 최근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경제는 심각한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채무, 내수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최대 60%에 달하는 관세에 곧 직면
  - 제조업은 이미 관세 부과를 피해 타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고용과 이윤이 감소하면 중국 경제의 기존 문제인 과잉생산능력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악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
  - 중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한 완화'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여, 유동성공급과 금리 인하 및 환율 조정 등 재정정책 외의 정책을 동원해 관세 전쟁에 대응할 것이 예상됨

국제기구

IMF

12.12. "개발도상국에서 경기 불확실성과 실시간 재정정책 조정(Output gap uncerntatinty and fiscal policy adjustment in real-time in emerging countries)" 워킹페이퍼 발표[14]

- 경기 국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정정책 결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도상국의 재량적 재정 확장 정책이 당시의 경기 국면의 불확실성에 반응한 것인지를 살펴봄
  - 1998년~2022년 기간 개발도상국 집단에 대한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자료 활용
  - 데이터에서 개발도상국 집단은 선진국 집단과 비교 시 산출격차*가 지속적으로 음수이고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며, 산출격차 충격에 덜 반응하는 특징이 있음

* 산출격차(output gap) : 잠재성장률 대비 실질 성장률이 큰가 작은가로 정의하며, 음수라면 경기 침체국면을, 양수라면 경기 호황 국면을 의미. 사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워 정책결정에는 산업동향 등을 통한 예상치를 반영

- 개발도상국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을 시사
  - 모형 추정 결과 개발도상국 정책결정자들이 경기 불확실성과 재정 집행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우려를 갖고 있을 때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보다 경기역행적인 재정정책을 취해서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임
  - 한편 재정집행에 대한 우려 없이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경기 역행적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 부채는 단기에 급등하여 장기에 걸쳐 해소되게 됨

1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4/12/13/Output-Gap_Uncertainty-and Fiscal-Policy-Adjustment-in-Real-Time-in-Emerging-Economies-559315

OECD

12. 19. "최신 보건 지출 동향: 최근 위기 너머로의 탐색(Latest health spending trends ; Navigating beyond the recent crises)" 정책 브리프 발간[15]

- 보건 지출은 2020년과 2021년 회원국에서 각각 5.0%, 8.2%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지출이 약 2% 감소했고 2023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별로 복귀 시기는 편차가 있었으며, 칠레와 한국은 평균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 기록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보건지출은 평균 16% 이상으로, 팬데믹 이전의 15%에 비해 높아졌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위, 에너지, 녹색전환 등의 우선순위들이 예산을 두고 경쟁 중
- 보건 서비스 시장의 주요 부문별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져, 팬데믹 초기 예방 지출은 40% 증가했으며, 병원 진료와 의약품 지출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
- 2023년 OECD 평균 보건 지출은 GDP의 9.2%로, 팬데믹 이전 8.8%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팬데믹 정점(2020~2021)보다 낮은 수준
  - 한국과 뉴질랜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음
- 다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GDP대비 약 1.4%의 추가 지출과 비효율적 지출을 제거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

12. 23. "녹색 예산 태깅을 넘어서 : 공공예산이 어떻게 기후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까? (Beyond green tagging: How can public budgeting support climate goals?)" 보고서 발간[16]

- 1장 '녹색 예산 태깅의 경험'에서는 이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험한 이점과 한계를 소개
  - 예산 개별항목의 환경영향을 평가, 집계하는 녹색 예산 태깅은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 효율성과 기후 목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주요 장점은 태깅을 통해 정부가 기후 정책에 배분한 예산의 비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서 정부의 기후 정책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중과의 소통이 강화된다는 점
  - 한계점은 대부분의 지출이 기후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며, 태깅 방법의 국제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통계적으로 활용하기에 데이터 품질이 낮아 국가 간 비교가 어렵고, 예산과 기후 목표 달성 간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임.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태깅이 환경효과를 과대평가하여 그린워싱의 위험성도 존재
- 2장 '다음 세대의 녹색 예산 도구'에서는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환경인지예산의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
  - 기후 목표와 영향 측정에 초점을 맞출 것: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을 분석하고 정책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한국의 경우 2024년 예산 중 1.5%인 10.9조 원을 온실가스감축에 배정하고 있음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확인 가능
  - 다차원적 연계 이해 : 기후 변화는 정책 지출, 세제 개편 등 재정에 직접 영향도 미치지만 경제성장, 고용 변화로 인한 간접 영향도 미치게 됨. 덴마크의 경우 GreenREFORM 모형으로 농림업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정-고용 효과 분석해 냄
  - 기후 목표 비용 평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일랜드는 경제모형을 통해 기후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수 손실과 추가 재정 지출이 연간 GDP 대비 약 1.6%일 것으로 추정하였음. 스위스는 넷제로 목표가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재정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
- 결론적으로, 녹색 예산 제도는 넷제로 목표 등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언한 목표(commitment)와 국가별 기후정책 계획과 전략, 중기 예산 제도 및 연간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예산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기후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고려하기 위한 투자, 정책 대안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기후 목표(commitment) 달성에 대한 비용추계 방침 등이 필요



1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latest-health-spending-trends_df0bb1ba-en.html
16)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beyond-green-tagging_b154d49b-en.html

01 January 2025

Fiscal Calendar

재정

새해 첫날 민생사업 예산 집행 (기획재정부, 1.2.)

- 정부는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3,306억 원)의 재정집행 추진
-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
- 올해 1분기부터 민생 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계획

경제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1.2.)

-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전망, 정책목표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 제시
- 4대 정책분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언급
-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계획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통계청, 12.31.)

-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2.3%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2.2%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9.8% 상승

1월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4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스페인 황금시대의 예술과 흥망성쇠 **찬란한 시작과 허망한 몰락**

스페인의 황금시대였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하였다.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은 그러나 이로 인해 이른 몰락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흥망성쇠에 따라 예술사에서도 위대한 걸작들이 탄생하며 황금시대란 이름에 걸맞게 반짝이는 자취들을 남겼다.

글 •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01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엘 그레코, 1586-88년,
캔버스에 유채, 480 x 360 cm,
산토 토메 성당, 톨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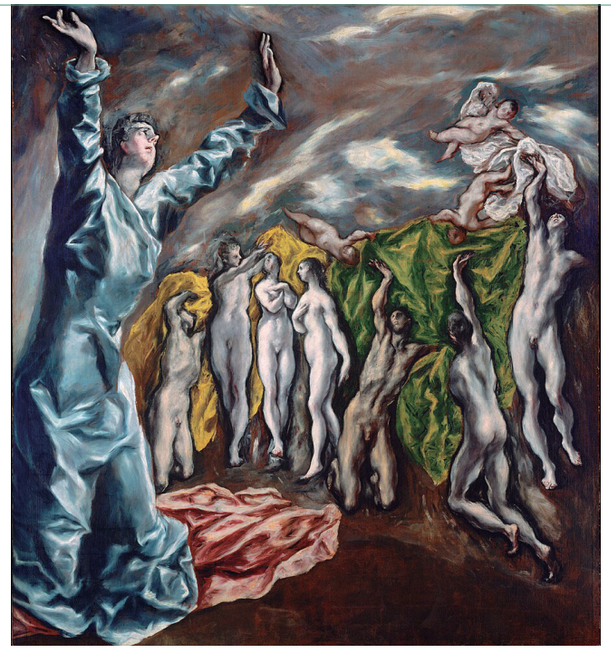
대서양의 재해권과 식민지를 보유한 스페인은 펠리페 2세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미국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의 주도권은 거의 언제나 유럽에 있었다. 항공기 여행이 보편화되기 전, 세계의 패권을 쥔 국가들의 공통점은 대양을 지배했다는 데에 있다. 유럽 각국 중에서 처음으로 대서양의 제해권을 소유했던 국가는 스페인이다.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함으로써 아메리카 식민지를 얻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바다 건너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사벨라 여왕의 손자인 카를로스 1세(1516-1556 재위)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1556-1598 재위) 시대에 스페인은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부분과 필리핀, 텍사스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다. 1503년부터 1600년까지 약 1만 6천 킬로그램의 은이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세비야항으로 운반되어 왔다. 그때까지 유럽에 존재했던 전체 은 보유량의 세 배가 넘는 분량이었다. 16세기의 스페인은 가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릴 만했다.

02 요한계시록의 다섯 번째 봉인

엘 그레코, 1608-14년,
캔버스에 유채, 222 x 193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03 성 놀라스코 앞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1629년,
캔버스에 유채, 179 x 223 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그러나 이 황금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16세기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격렬한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스페인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종교재판, 유대인 추방, 무슬림 추방 등 종교적 순혈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스페인의 이른 몰락을 불러왔다. 특히 유대인을 이교도로 취급해서 모두 국외로 추방한 조치는 국가의 파국을 가져온 결정적 실책이었다. 스페인 경제를 움직일 중추 세력이 없어지면서 국가 경제는 점차 악화하였다.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수입되는 은을 비롯한 재화는 국내 경제 발전이 아니라 성당을 짓는 데 쓰였다. 식민지 경영이라는 유례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16세기의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너무도 허약했다. 설상가상으로 합스부르크 가의 일원이었던 스페인 왕가는 거듭된 근친혼으로 왕가 자손의 대부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지 못했다. 왕실의 후손들이 계속 사망하면서 스페인 왕가의 멸손이 코 앞에 다가왔다.

거듭된 몰락과 환멸 속에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엘 그레코의 걸작들이 탄생했다.

쇠퇴와 환멸 속에서 싹튼 스페인 예술

1588년 스페인이 자랑하던 무적함대는 엘리자베스 1세와 드레이크 제독의 영국 해군에 패배했다. 이 패배로 대서양의 제해권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 1579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의 지배에 반기를 든 네덜란드는 1609년 휴전과 함께 사실상 독립을 쟁취했다. 일련의 사태로 스페인 사람들은 영광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펠리페 2세 시대에 두 번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고 치세 말기에는 전염병까지 돌았다. 1500년대 내내 쏟아진 식민지의 금과 은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계획과 저축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거듭된 몰락과 환멸이 국가를 지배했다.

이러한 환멸 속에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엘 그레코의 걸작들이 탄생했다. '돈키호테'의 전, 후편은 각각 1605년과 1614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시기는 톨레도에서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엘 그레코(1541-1614)의 그림들은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환상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작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에 화가는 지상과 천상을 함께 그려 넣었다. 1323년 사망한 오르가스 백작은 생전에 십자군에 참전했던 용감한 기사였다. 백작의 장례식에 성 아우구스투스와 성 세바스티아누스가 나타나 매장을 돕는 기적을 일으킨다. 한편, 천상에서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백작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별로 놀라거나 감격하지 않는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환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04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1635년,
캔버스에 유채, 184 x 98 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요한계시록의 다섯 번째 봉인', '예수의 세례' 등 엘 그레코의 후기작들은 신비와 열정적 신앙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는 듯한 작품들이다. 이제 화가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겠다는 개념을 완전히 이탈했으며 르네상스 화가들이 중시하던 해부학이나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도 포기한 듯하다. 기이할 정도로 환한 빛이 그림의 신비스러움을 증폭시키며 영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

엇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리베라와 수르바란의 작품들은 엘 그레코보다는 이탈리아의 고전적 스타일을 더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그림에서도 엘 그레코의 캔버스에 담겼던 종교에 대한 열망은 분명히 드러난다.

05 자화상

디에고 벨라스케스, 1650년, 캔버스에 유채, 45 x 38 cm, 발렌시아 미술관, 발렌시아



벨라스케스가 그려낸 황금시대의 마지막 광휘

펠리페 4세(1621-1665 재위)의 치세에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부흥의 기운을 맞이한다. 열여섯의 나이에 즉위한 펠리페 4세는 안달루시아의 귀족인 올리바레스 백작을 총애해 그에게 국가 통치를 맡기다시피 했다. 권력을 잡은 백작은 동향 출신의 지인들을 몇 명 마드리드로 불러들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였다. 1623년, 스물네 살의 젊은 벨라스케스는 고향 세비야를 떠나 마드라드로 간다. 펠리페 4세는 이 화가가 젊음의 생기와 군주의 위엄을 함께 표현하는 초상을 그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첫 알현 6주 후에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1660년 화가가 사망할 때까지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대략 120점의 벨라스케스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프라도의 상징 같은 걸작 '시녀들'을 비롯해서 최고의 후원자였던 펠리페 4세의 초상과 그의 딸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 그리고 각종 종교화와 풍경화까지 프라도의 벨라스케스 컬렉션은 참으로 다양하다. 벨라스케스는 그전 궁정화가들의 작품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합스부르크 스페인 왕실의 취향을 파악했고, 그 취향에 맞추어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고 솔직한 초상을 그렸다. 이탈리아 고전파의 판에 박힌 듯한 초상이 아닌, 생동감 넘치며 자연스러운 왕족의 초상이 벨라스케스의 손에서 줄지어 탄생했다. 그의 그림들은 보는 이들에게 예술적 환영을 선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스페인의 황금시대가 남긴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시녀들'은 화가가 왕과 왕비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 방에 마르가리타 공주가 방문한 순간 같기도 하고, 화가가 공주의 초상을 그리는 동안 국왕 부처가 들어선 순간 같기도 하다. 그림 한가운데의 거울 안에 국왕과 왕비의 모습이 얼핏 보인다. 그림의 주제는 굳이 말하자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초상'일 것이다.

애당초 벨라스케스는 특정한 한 장면보다는 왕실의 일상, 자연스러움과 위엄이 공존하는 순간을 영원히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가는 그림 왼편에 커다랗게 캔버스를 배치하고 산티아고 기사단의 제복을 입은 자신을 그림으로써 궁정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영예를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황금시대였다고는 하지만 펠리페 4세 궁정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벨라스케스는 밀려 있는 봉급을 정산해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거듭 국왕에게 보냈다.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은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1640년을 전후해 제국을 지탱해 온 정치, 경제적 시스템은 뚜렷하게 와해되는 징후를 보였다. 1668년 스페인의 한 지역이던 포르투갈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독립해 나갔다. 문화적 융성이 정치, 경제적 쇠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벨라스케스가 1660년에 전염병으로 급사했고 리베라는 1652년에, 수르바란도 1664년에 죽었다. 유럽 각지에서 과학과 문학, 철학, 예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걸작이 쏟아질 때 스페인 제국은 몰락했고 황금시대의 예술 역시 제국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거듭된 근친결혼의 결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손들은 모두 허약했다. 펠리페 4세는 두 번에 걸친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을 대부분 잃었다. 펠리페 4세의 두 번째 왕비인 신성 로마 제국의 마리아나 공주는 그의 조카딸이기도 했다. 마리아나 공주는 자신의 외삼촌과 결혼했던 것이다. 펠리페 4세의 왕위를 이어받은 카를로스 2세가 1700년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졌다. 스페인의 왕위는 전쟁 끝에 프랑스 부르봉 왕가로 넘어갔다.



06 시녀들

디에고 벨라스케스, 1656년, 캔버스에 유채, 318 x 276 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는 부르봉 왕가의 카를로스 3세 치세(1734-1759) 중에 현재와 거의 엇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카를로스 3세는 왕궁과 식물원을 짓고 시벨레스 광장을 만드는 등 마드리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 애썼다. 알칼라 문 등 이 시대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많은 건물과 기념비들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장대하다. 3천 개가 넘는 방을 가진 왕궁도 카를로스 3세 치세에 완공되었다. 궁정을 가득 메운 보물들과 호화로운 궁정의 인테리어는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황금시대를 추억하게끔 만든다.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변경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효과

나라살림멘토단 **김대은** 교수





※ 2025년 본 지면에는 나라살림멘토단과 함께하는 "내가 써온 한국재정사" 와 옥동석 교수님의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가 격월로 번갈아 연재됩니다.

"최저가낙찰제 폐지하라!", "최저가 확대 결사반대". 2011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정부는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청회에 앞서 업계 측은 최저가 확대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자체를 저지하여 공청회 개최는 무산되었다.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배경에는 예산 절감을 통해 발주 물량 증가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격심사낙찰제의 운찰제적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업계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한정된 건설 물량에 부적격 업체까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권 사수를 내건 업계의 반발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본래 취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209조 원 규모(GDP의 9.1% 수준, 2023년 기준)로 57만여 개의 조달업체가 참여하여 7만여 개 수요기관(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시설공사에 대한 계약 및 납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조달업체에는 매출과 수출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 안정적 시장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경쟁입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수주와 직결되어 계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설공사는 공공조달에서 비중이 매우 큰 분야다. 완공된 시설물은 건설비용 이외에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완공 단계에서 높은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건설업의 비중을 생각할 때 건설업계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계약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나라 공공공사 낙찰제도 연혁

	낙찰제도	비고
1962.01 ~ 1971.12	• 최저가낙찰제도	•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1972.01 ~ 1975.12	• 부찰제: 예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의 평균 입찰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에 대응
1976.01 ~ 1981.02	• 최저가낙찰제도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변경
1981.03 ~ 1983.03	• 부찰제: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한시적 재도입
1983.04 ~ 1990.03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 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의 경우 심의 • 부찰제: 소규모 공사 · 1983.07~1984.03: 30억 원 미만 · 1984.04~1985.03: 20억 원 미만 · 1985.04~1990.03: 10억 원 미만	•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 도입 • 소규모 공사는 부찰제 적용, 단계적으로 축소
1990.03 ~ 1993.02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 부찰제 폐지 및 최저가낙찰제도 전면 시행
1993.02 ~ 1993.09	• 최저가낙찰제도: 20억 원 이상 · 1993.07.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입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20억 원 미만 예정가격 85% 이상에서 최저가	• 저가심의제도 폐지 (객관적 기준 결여) •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1993.09 ~ 1995.07	• 최저가낙찰제도: 100억 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100억 원 미만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1995.07 ~ 1996.12	• 적격심사제도: 100억 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100억 원 미만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성수대교 붕괴(1994.10) 등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적격심사 도입
1997.01 ~ 1999.09	• 적격심사제도 · 1997.01~1999.02: 고시금액 이상 · 1999.02~1999.09: 30억 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 1997.01~1999.02: 고시금액 미만 · 1999.02~1999.09: 30억 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확대
1999.09 ~ 2000.12	• 적격심사제도	• 적격심사제도 전면 시행 (최저가낙찰제도 폐지)
2001.01 ~ 2003.12	• 최저가낙찰제도: 1,000억 원 이상 PQ 대상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적격심사 변별력 저하,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 등의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
2003.12 ~ 2006.05	• 최저가낙찰제도 + 저가심의제도: 500억 원 이상 PQ 대상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및 저가심의제도 재도입
2006.05 ~ 2016.01	• 최저가낙찰제도 + 저가심의제도: 300억 원 이상 PQ 대상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및 저가심의제도 개선(2단계 심사제도 도입)
2016.02 ~ 2019.09	• 종합심사낙찰제도: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제도: 300억 원 미만 공사	•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최저가낙찰제도 폐지): 300억 원 이상 공사
2019.09 ~ 현재	• 종합심사낙찰제도: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 • 간이형종심제: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100억 원 미만 공사	• 종합심사낙찰제도 확대: 100억 원 이상 공사

출처: 이유섭 외(2013) p. 9~10. <표2-1>을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 하나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낙찰제도의 근간이었으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평가방식에 따라 다양한 낙찰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시설공사 낙찰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44~45p 참조), 시대별로 당시의 경제 여건에 따른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2년 최저가낙찰제도를 시작으로 1972년 부찰제, 1995년 적격심사제도,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당시의 경제적 여건 및 입찰자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었으며,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재도입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종전의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가격만을 심사함으로써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빈번한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각종 문제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종심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낙찰률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평가항목의 변별력 부족, 빈번한 계약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심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가격평가 부문에서 균형가격 낙찰방식은 평균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운찰제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담합의 소지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가격 낙찰방식을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비가격 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와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낙찰률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종심제의 비가격평가 부문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 책임 등 평가항목 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적격심사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비가격 항목의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을 낮춰 낙찰률만 잘 맞추면 되는 ‘운찰제’ 문제를 발생시킨다. 종심제의 비가격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적격심사보다 다소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평가항목이 유사하며 상향 평준화되기 쉬운 정량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계량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업체들이 실질적인 품질개선 노력보다 낙찰을 위한 지표 값 상승에만 집중함으로써 공사의 세부적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가격 요소에 대한 심사기준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비가격 요소를 평가할 때, 일부는 정성평가 방식에 기반을 둔 상대평가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계량지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들도 경쟁업체보다 품질이나 기술력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된다. 다만, 정성평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발주기관은 정성평가 역량이나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상대평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 정성평가 방식이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발주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성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부과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조달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가격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조달청이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상대평가와 정성평가를 주관하면서 이러한 평가방식을 여러 공사에 적용하여 경험을 축적하면 조달청의 심사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AI 기술을 계량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종심제에서 비가격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고려되는 계량지표들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세부유형, 발주기관, 지역 등 세부적인 특성의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AI 기술을 조달 빅데이터에 적용하여 최종적인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거나 기존 지표의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성과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가 갑을관계를 형성하거나, 밀착된 친분을 유지하여 감리의 역할이 소홀해지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책임감리를 강화하여 감리체계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지출 증가와 부실시공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책임감리업체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업체 선정 시 업체의 과거 업무수행 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야 한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조달 기준의 강화 등 기술력과 성과 평가 중심의 조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량 위주의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전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입찰·계약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1) 김빛마로(2017),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36 참조
2) 황순주·이화령(2020),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pp.129-133 참조





전기차 캐즘, 그 이후를 대비하자

이항구 AINs 연구위원, 前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前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거꾸로 가는 국내 전기동력차 수요

전기동력차(이하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캐즘(Chasm)을 넘어 공포증(Phobia)까지 유발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9,435만 대로 추정된다. 전기차 판매가 310만 대 증가했지만 내연기관차 판매는 150만 대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의 수요가 기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를 넘으면 급증한 후 캐즘에 직면해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게 된다. 세계 전기차 수요는 세계 자동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에 110만 대로 신차 판매의 1%를 넘어선 후 7년 만인 2024년에는 16배가 증가한 1,780만 대를 기록했다. 동 기간 중 전 세계 내연기관차 수요가 기복을 보이면서 감소했지만, 전기차 수요는 연평균 34%가 증가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견인한 것이 중국이란 점에서 여타 국가의 전기차 수요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노르웨이의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이 89%에 달했지만, 유럽 22%, 미국 8%, 우리나라 9%로 중국의 4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중국, 유럽과 미국이 세계 전기차 수요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처럼 모든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자동차 보급 대수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의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전기차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3년에 테슬라와 BYD가 창업하여 2008년에 배터리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PHEV)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닛산과 미쓰비시가, 2012년에는 르노가 소형 BEV를 상용화하자 우리 정부도 2010년부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섰다. 산학연관이 배터리 교체형과 무선 충전 등 혁신적인 충전 방식과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REEV) 등 최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기술과 수익모델 개발을 검토하자 선진국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전기차 내수가 2023년부터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14만 6,883대에 그쳤다. 국산 전기차 판매는 10만 대를 조금 넘었다.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원인을 살펴보면 비싼 가격과 적은 모델 수, 충전의 불편함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물량 대비 충전기 구축 대수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보와 홍보 부족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 충전기를 완속과 급속으로 분류해 호칭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소비자들이 외국과는 달리 완속 충전을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가쟁명식 전기차 화재 원인 주장과 전기차 모델 고급화 속에 구매 보조금을 축소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PHEV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2021년에 중단하면서 내수시장에서는 수입 PHEV만 판매되고 있다. 당분간 전기차 수요를 REEV를 포함한 PHEV가 주도할 예상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BEV, PHEV, 수소전기차(FCEV)와 태양광전기차를 전기동력차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REEV도 전기동력차다. 하이브리드 카(HEV)는 전기동력차가 아니며, PHEV는 HEV가 아닌 전기동력차다.

전기동력원별 지난해 판매 물량은 BEV가 1,150만 대, REEV를 포함한 PHEV가 629만 대, FCEV가 1.5만 대를 차지했다. 국가와 지역별로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2.4% 감소한 290만 대를 기록했을 뿐 미국은 8.3% 증가한 130만 대, 중국은 32%가 증가한 1,256만 대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인 신에너지차(NEV) 생산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세계 전기차 시장의 70%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에 2035년까지 승용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올해 달성할 예정이다.

2024년
세계 자동차 판매 **9,435**만 대



전년 대비 **1.7**% 증가

그 중
전기차 판매
310만 대 증가

내연기관차 판매
150만 대 감소

자료: 중국 정부 통계, 유럽자동차협회 통계(ACEA), Wards 등을 종합해 저자 작성

전기동력차로의 전환이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

세계 자동차 업계는 중국발 자동차산업의 구조 개편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세계 자동차산업의 투자 및 교역 구조 변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매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에 대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전기차업체들의 다양한 저가 모델 투입을 고려할 때 전기차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설령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동등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수요가 회복할 예상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미국 자동차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입 전기차의 가격과 모델이 다양화하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업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산 전기차의 성능과 품질 향상은 기본이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는 2022년에 500마일(800Km)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팔린 전기차의 평균 주행 거리는 283마일(453Km)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기차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EU 집행위와 의회도 독일 자동차산업이 흔들리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토요타가 HEV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도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의할 사안은 토요타가 HEV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30년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350만 대로 현대차 그룹과 6만 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환경차인 HEV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수요가 뒷받침되고 EU가 2035년 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2029년부터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산업과 통상 정책이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역공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전문인력의 양성은 당연한 과제고, 기술개발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민관은 현안인 전기차 화재 방지 등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업체가 배터리 시장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도록 배터리업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주춤하더라도 유럽과 일본 배터리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업체의 사업 전환도 촉진해야 한다. 전기차 시대가 멀어질 것으로 판단해 전환하지 않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내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공급업체 수가 500개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위기는 전기차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광물과 소재의 원활한 조달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등의 재활용 기반도 구축해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배터리 내구성이 예상보다 길어 폐전기차에서 탈착한 배터리를 ESS용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 제공과 홍보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 분류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와 정보의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차 수요가 과거 인기를 끌었던 클린 디젤차 수요를 넘어선 지도 오래다. 전기차 산업이 캐즘을 건넌 후 자동차산업의 대경쟁 시대가 전개될 예정이다. 세계 자동차 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두세 자리 숫자의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자동차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 20년간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3%에 그쳤다. 전기동력차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만이 우리 제조업의 양대 축인 자동차산업과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도시의 발전: 세종과 화성

시대의 변화를 담은 두 도시

글 • **김병재** 前 2014 광주비엔날레 설치 총괄 감독, 어반마이너 대표

SEJONG



HWASEONG

<컨택트>라는 SF 영화를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중첩된 모습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공간의 중첩은 상상의 장면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조금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가 집합된 국가의 틀로 다시 확대해 본다면 과거의 도시부터 현대에 만들어진 도시까지 다양한 시간의 도시들이 같은 시공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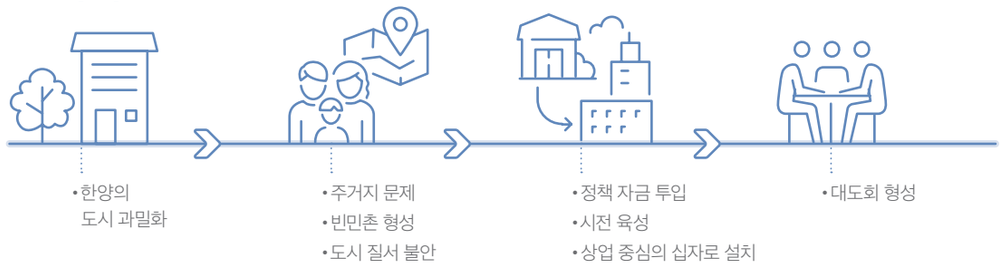
도시는 살기 적합한 자연환경에 촌락을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도 있지만 목적을 두고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계획도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수원·화성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종 행복도시(행정복합중심도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두 도시는 200여 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지만, 계획도시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를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은 부분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시간으로 돌아가면 조선시대 정조는 수원의 고을 하나를 팔달산 아래에 옮기라는 명을 내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울 것을 계획한다. 국가적 재정이 동원되어야 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을 통해 18세기에 나타나는 조선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은 건국 시기 유교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여 경제적으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두었다. 또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 상업을 가장 낮은 일로 여겼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는 농업의 기술적 발전으로 생산력 증가,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물자와 일거리가 한양에 집중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의 말로 표현하면 도시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다. 한양의 도시 과밀화는 한계를 보이며 주거지 문제, 빈민촌 형성, 도시 질서 불안 등 현대의 도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방편의 하나로 정조는 수원·화성을 만들어 그 기능을 분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상업을 통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전(市廛)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자금을 투여하기도 한다. 수원·화성의 발전을 위해 조정에서 빌려온 6만 5천 냥 가운데 1만 5천 냥을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가게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전은 번성하여 대도회(조선시대에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 도회, 대도회로 구분하며 지금의 도시라는 말에 가깝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1] 수원·화성은 군주제 왕권국가라는 배경 때문에 왕의 개인적 목적을 담고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보면 시대적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는 공간적 전략으로 국가가 도시를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화성

18세기



다시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로 돌아와 보면 세종 행복도시의 건립 배경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닮아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집적 도시의 한계를 나타내며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성장보다 이에 동반하는 사회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다.[2] 이와 더불어 2000년 UN에서 발표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s Goals),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s Goals)와 같이 급격한 성장보다는 보편적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국제사회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세종 행복도시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였다. 세종 행복도시는 도시면적의 절반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시 중심축에 의존하는 선형 도시 구조가 아닌, 균형적인 도시 성장을 지향하는 환상형 도시 구조를 적용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도시의 공간에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스마트도시 기반의 친환경적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미래지향적 도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한양의 도시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조는 수원·화성을 만들고
상업을 통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자금을 투여하기도 한다.



1) 김동욱, 2002,「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 손정렬, 2007, "새로운 유형의 도시들의 자족성과 발전가능성: 행정중심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우리는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집약된 도시에 주목하게 되는데 스마트도시 기저에는 기존에 정부나 건설 및 시행사 등 공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사용자인 시민들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자리하고 있다[3]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스마트 정류장이나 행정 플랫폼 등의 스마트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수단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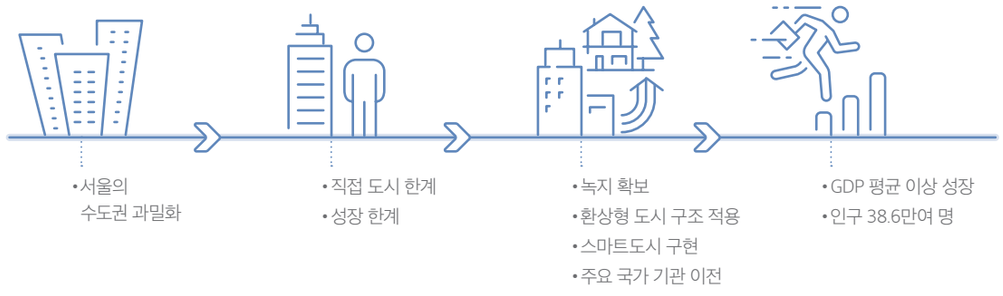
조선의 새로운 도시 모델인 수원·화성을 만드는 기저에도 실학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 유교의 관념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실학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학에 활용된 기술뿐만 아니라 행궁을 통해 왕이 직접 백성의 삶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였고 수원·화성의 가로를 T자가 아닌 십자로로 설치하여 기존 행정과 군사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들의 소통을 통한 상업 도시로서 건설하고자 하였다.[4] 두 신도시인 수원·화성과 세종 행복도시 모두 사람들의 삶을 위한 도시로서 새로운 공간구조를 택한 것이다.

세종 행복도시와 수원·화성은 20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정조의 의지로 시작된 계획도시 수원은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수원특례시로 지정되어 도시의 행정적 위상도 높아진 상황이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8세기 국제적 흐름을 보면 산업혁명을 통한 도시의 시대가 열린 시기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조선의 사회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시대를 도시로 구현한 것이 수원·화성이라 할 수 있다.

세종 행복도시는 2002년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시작하여 2007년 건설을 시작,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중요 국가

세종

21세기



3) 정재승, 2020,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정보과학지

4) 김동욱, 2002, 앞의 책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비전 실현의 핵심적 의지와 표현을 공간에 담아 짓는 것이 도시인 것이다.

기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정주여건을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DRP)은 2014년 이후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률[5]을 보이고 있고 인구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386,525명으로 2030년 계획한 인구 50만 명 기준 약 77%에 달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규모를 넘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적인 행위다. 하지만 그 행위를 살펴보면 개인이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다. 지어진 집에 입주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경험, 통찰을 탐아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 집을 설계하고 짓는다. 이것을 국가가 도시를 만드는 데에 대입하면, 국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통찰과 시대적 변화,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를 공간에 표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비전 실현의 핵심적 의지와 표현을 공간에 담아 짓는 것이 도시인 것이다. 200여 년의 시간차를 둔 두 계획도시는 현재 함께 존재하고 있다. 18세기에 수원·화성으로 시작된 도시 수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00년 후 미래 세대는 세종 행복도시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세종 행복도시에 대해 지금 우리가 수원·화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입해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모델의 등장은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한 상상과 기대로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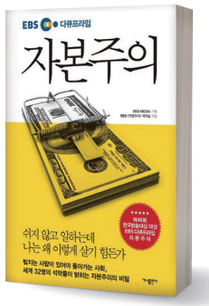
5) 통계청 「지역소득」, 2025,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2018년 세종시의 일시적 둔화로 전국 평균 0.1% 부족한 성장률을 보인 것 외에는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참 고 문 헌

· 김동욱, 2002,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도서출판 돌베게 참고작성
· 손정렬, 2007, “새로운 유형의 도시들의 자족성과 발전가능성: 행정중심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정재승, 2020,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정보과학지

나의 한 해를 전망하고 계획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2025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는 출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초와 전략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이 책은?

32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하는
금융과 돈, 소비에 관한 33가지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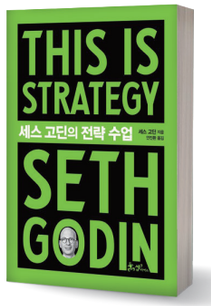
자본주의 시대다. 하지만 정작 자본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하는 돈과 자본주의의 비밀에 대해 풀어낸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낸 이 책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부터 자본주의의 모순과 돈의 속성, 그리고 마케팅, 합리적인 소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파헤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금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자본주의와 금융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책은 방송 5부작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심층적인 내용들이 쉽게 정리되어 있다. 뉴스에서 들어본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저축은행 사태, 심지어는 마트에 가면 왜 나도 모르게 계획보다 더 많이 사게 되는지처럼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파생되는 숨은 유혹과 위협까지, 숨겨진 진실과 무서움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준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1. 자본주의의 진실: 물가는 계속 오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빚이 있어야 돌아간다.
2. 돈=신용: 은행예금+대출은 은행이 창조한 결과물이다. 펀드는 저축이 아닌 투자이며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다.
3. 달러와 미국 경제: 미국 사회를 알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4. 소비 마케팅의 비밀: 쇼핑은 무의식이며 감정이다.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

금융 생활 4가지 축=저축, 투자, 소비, 기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복지



「세스 고딘의 전략 수업」

세스 고딘 지음 | 쌤앤파커스

이 책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출발점,
내일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새해다. 누군가는 취업이나 승진, 또는 투자나 창업, 자기 계발, 인사나 회계, 조직이나 기업의 브랜딩, 멀게는 노후 대비까지 계획할 시기다. 국내외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산업의 생태계가 통째로 뒤집히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오늘날, 작가는 단순한 법칙이나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교한 사고방식으로서의 전략에 대해 말한다. 그는 실용적 접근법으로 전략을 세공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것들을 알려준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가 먼저 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내일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힘든 작업이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나만의 삶의 원칙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정립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전략에 관한 12가지 슬로건

1.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그려보아라.
2. 설득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라.
3. 이길 수 없는 게임은 하지 말라.
4. 프로젝트를 관리하라.
5. 직접 결정하라.
6. 변화를 일으켜라.
7. 자산을 구축하라.
8.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9. 확산력이 진보로 이끈다.
10. 매몰 비용을 무시하라.
11. 조직은 변화한다.
12. 당신은 교통 체증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교통 체증의 일부다.

똑똑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dBrain+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관리, 이체,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입니다. dBrain+는 한국은행, 경찰청, 조달청, 관세청 및 금융결제원 등 81개 기관, 144개 시스템과 연계되어있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4.7만 명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1.7만 명이 접속해 자금이체 등 재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연간 1,615조 원의 국고수납과 2,723조 원의 자금이 이체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전체 Life Cycle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여러 기관들의 재정시스템들을 모두 연계하여 유용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한국 재정제도의 혁신성과가 모두 반영된 시스템으로서, dBrain+를 통해 재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구축 및 운영경과

2004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중기(5년) 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 연계
  * NaFIS(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 treasury system)
  * FIMSys(Fiscal Informaion Management System - budgetin)

2005



- 시스템 구축을 위한 BSP, BPR, ISP
-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 총액배분 자율편성
  - 예산편성/집행/결산의 기준
  - 사업중심예산체계

2006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NaFIS, FIMSys 통합)

2007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통

2009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

2013



-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2015~2019



-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열린재정) 개통
- 차세대 dBrain 구축 착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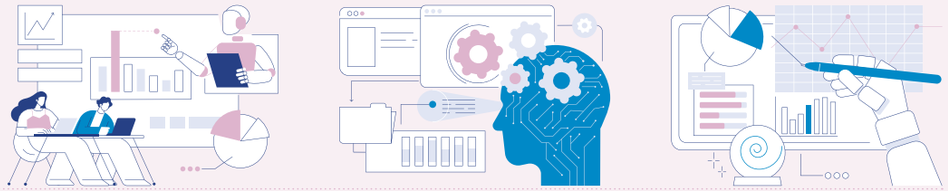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통

dBrain+ 주요 기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구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 - 집행 - 자산관리 - 결산 등 재정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재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스템

금융기관 시스템
- 한국은행 (국고금, 이체 시스템)
- 시중은행
-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시스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통합)

대량징수기관
-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국유재산
- 자산관리공사,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감사원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조달청
- 국가전자조달 G2B

자체시스템 보유기관
-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 국방 재정정보
- 우정사업본부 통합경영관리

81개 기관,
144개 시스템 연계

재정업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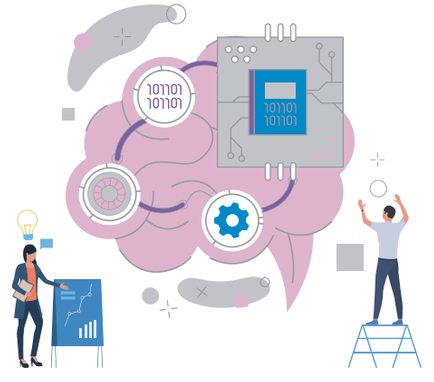
- 사업관리
- 실시간 국고금(EBPP, EFT) 관리
- 성과관리
- 자산(국유재산·물품)관리
- 예산관리
- 조달관리
- 수입·지출관리
- 결산관리

업무지원

- 포털
- 온라인
- 전자결제

재정데이터시스템

- 재정정보서비스
- 정책상황관리
- 데이터분석센터
- 열린재정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세부 사업 분야의 예산 현황과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궁금하거나
예산편성현황 등 다양한 재정 정보가 궁금할 때, 재정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볼 수 있는 **재정분야 정보공개시스템 포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열린정부 ② 열린재정 ③ 열린열매 ④ 열린나라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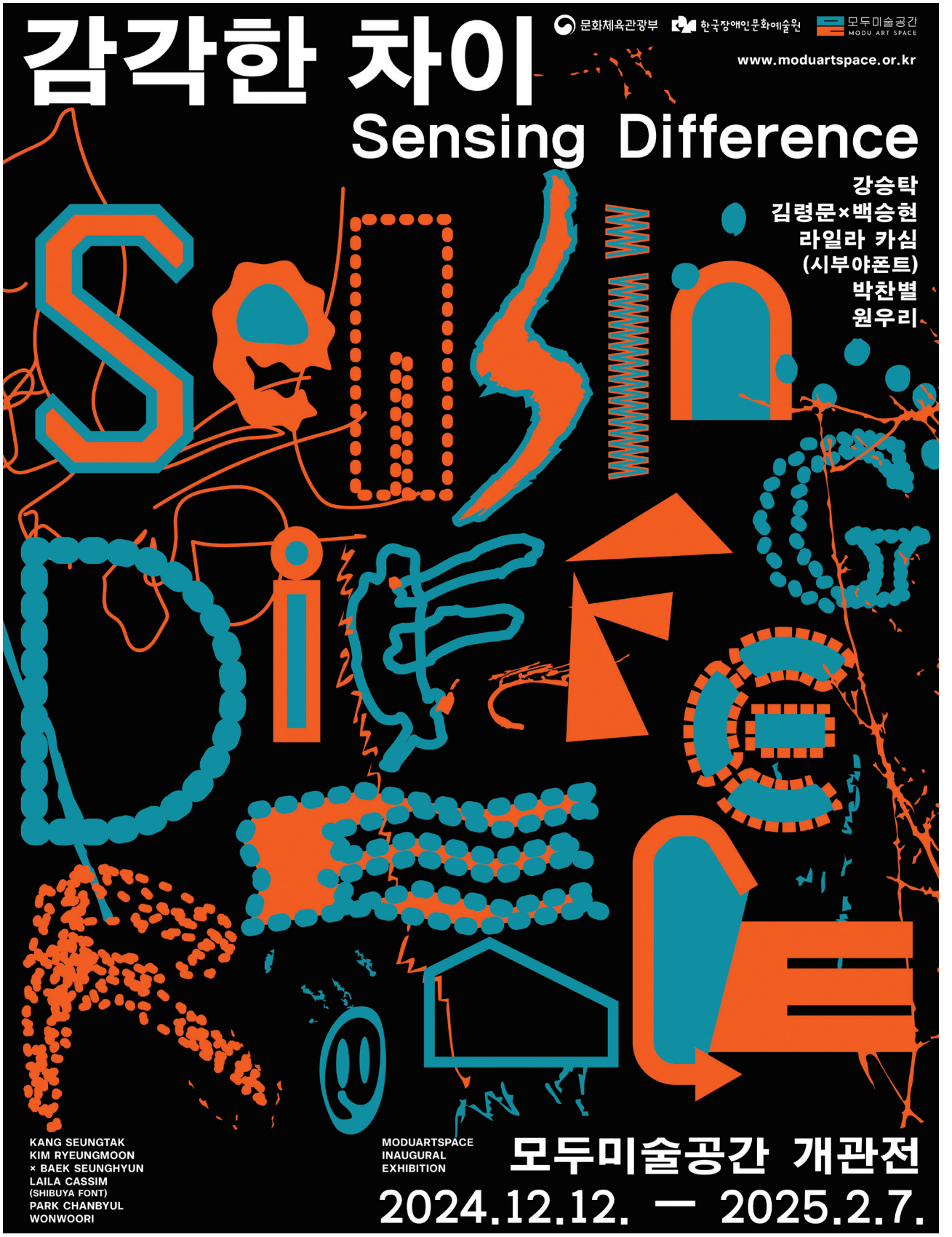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1.25. ~ 2.16.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와 1월호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ISSN 2508-8971